제27호

KIPEC BRIEFS

미국의회 주요동향



목차

1. 의회 일정 및 소식 ····· 2
2.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 4
3.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 (CRS 리포트 요지)····· 5

의회 일정 및 소식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음영 표시 : 의회 회의

□ 10월 미국 의회·정치 주요 소식

미 의회, 중간선거 이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및 국가채무한도 논의

미국 의회는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재개되는 회기를 앞두고 2027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의회는 연방정부 운영을 12월 11일까지 유지하기 위한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켰으나, 2027 회계연도 전체 세출법안은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연간 세출법안을 마무리하거나 추가 임시예산안을 통해 예산 협상을 2027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시점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사 드라우로(Rosa DeLauro) 의원 등은 연내 예산안 처리를 선호하는 반면, 상원에서는 중간선거 결과를 확인한 뒤 협상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선거 이후 의회의 정당별 의석 구성 변화가 예산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협상 쟁점으로는 국방비 증액, 국내 정책 프로그램의 지출 규모,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 권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행정부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집행을 보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비와 국내 정책 관련 지출 수준을 두고도 정당 간 이견이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국가채무한도 조정 문제도 중간선거 이후 의회의 논의 과제로 제기됐다. 10월 22일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Lame-duck Session)에서 추가 예산조정법안(Budget Reconciliation Bill)을 추진하면서 국가채무한도 상향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채무한도는 연방정부 세출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로, 12월 11일 임시예산 만료 시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향후 의회에서는 연간 세출법안 처리 일정과 추가 재정 관련 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대러시아 제재 일부 면제…미 의회 초당적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6일(현지시간)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에 따른 주요 제재 및 관세 조항의 적용을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8일 제정된 이 법은 러시아 금융·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러시아산 수입품과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 및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제3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 제115조에 규정된 국가이익에 따른 면제 권한을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9일 러시아산 경유(diesel fuel)의 미국 내 수입을 포함한 관련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경유 공급 합의를 발표했으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운송·하역·수입 관련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 제135호(General License 135)를 발급했다. 행정부는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 증가와 기존 대러시아 제재 정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미 의회에서는 공화·민주 양당 일부 의원들이 행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며 제재 시행을 촉구했다. 10월 13일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의원 등 초당적 상원의원 12명은 러시아산 경유 공급 합의의 철회와 제재법 시행을 요구했다. 이어 10월 15일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민주당 하원의원은 러시아산 경유 수입 관련 허가를 무효화하고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러시아의 부패한 석유 거래 금지법안(Prohibit Corrupt Russia Oil Deals Act)」(H.R.10828)을 발의했다. 10월 22일에는 브라이언 피츠패트릭(Brian Fitzpatrick)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에 대한 면제·허가를 제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지원을 유지하는 「2026년 로널드 레이건 힘을 통한 평화법안(Ronald Reagan Peace Through Strength Act of 2026)」(H.R.10866)을 발의했다.

한편, 행정부는 이번 면제 조치에도 기존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제재 및 관세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최대 60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0월 26일 진 샤힌(Jeanne Shaheen) 민주당 상원의원 등 초당적 의원들은 미국 주요 금융기관과 항만 당국, 연료 유통업체에 서한을 보내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거래 기록의 보존을 요청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의회 일부 의원 간 제재 적용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관련 법안의 처리와 행정부의 제재 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국가 핵심광물 위원회 설립법안 (H.R.10681)	발의	Susie Lee (민-네바다) (2026. 10. 1.)	국가 핵심광물 위원회(National Critical Minerals Council) 설립을 위한 법안임. 핵심광물 관련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한 입법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 정책에 관련됨.
H-1B 비자 사기 단속 강화법안 (H.R.10643)	발의	Beth Van Duyne (공-텍사스) (2026. 10. 1.)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의 사기 및 부정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임. H-1B 비자 프로그램의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된 입법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내 고용 및 비자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룸.
관세 피해 지원 및 국내 투자·고용 촉진법안 (H.R.10759)	발의	John James (공-미시간) (2026. 10. 6.)	미국의 관세 및 외국의 보복관세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내 제조업체, 농업생산자 등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임.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환급성 지원, 저금리 대출 및 국내 투자 지원을 통해 생산시설 유지, 고용 보호, 공급망의 미국 내 이전을 촉진하도록 규정함.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청 AI 보안 전담반 설립법안 (H.R.10752)	발의	Troy A. Carter (민-루이지애나) (2026. 10. 6.)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청(CISA)에 인공지능 보안 전담반(Securing AI Task Force)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임. 인공지능 관련 보안 위험에 대한 대응과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다루는 입법임.
미국·인도 의회 간 교류협력 법안 (H.R.10819)	발의	James Gallagher (공-캘리포니아) (2026. 10. 15.)	미국과 인도 의회 간 협력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임. 양국 의원 간 교류와 정책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회 차원의 협력 및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외국정부 소유 언론사의 FARA 등록법안 (S.5682)	발의	Rick Scott (공-플로리다) (2026. 10. 15.)	외국정부가 소유한 언론매체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른 등록에 관한 법안임. 외국정부 소유 언론매체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를 통해 외국정부의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 (CRS 리포트 요지)

1. 개요

북한은 지난 10년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 본토와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규모와 기술적 정교함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한국·일본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비핵화 협상을 거듭 거부해 왔다. 2025년 미국 정보공동체의 연례위협평가(Annual Threat Assessment, ATA)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정권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2025년 4월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핵·미사일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지식, 물자의 공유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 북한의 핵무기 정책 및 핵실험 동향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국가 정책으로 공식화하고 핵전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2년 헌법을 개정하여 자국을 핵무장 국가로 규정했으며, 2013년에는 핵무기의 사용 목적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어 2022년 9월 핵무기 사용 조건을 구체화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이 법률이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것으로 평가했다.

2021년 1월 북한은 국방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전술핵무기 개발, 신규 잠수함 확보, 다탄두 미사일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확도 향상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6년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 관련 북한 정부 보고서에는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고 영구적인 것으로 공고화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2018년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일부 핵실험 갱도 입구를 폭파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2022년 3월부터 갱도 복구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미국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은 2025년 북한이 핵실험장을 복구했으며, 원하는 시점에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3. 핵물질 생산 및 핵탄두 보유 현황

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영변에서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영변과 강선에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26년 3월 IAEA는 두 지역의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 중이며, 영변에 강선 시설과 유사한 신규 건물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같은 해 4월 DIA 국장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영변에 추가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 9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으며, 실제로 약 5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2025년 당시 DIA 국장은 북한이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는 동시에 다양한 운반체계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탄두 설계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와 전술핵무기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미국 연례위협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전술핵탄두라고 주장하는 장치를 공개했으며, 무인 수중 운반체와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최소 8종의 운반체계에 해당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 탄도미사일 전력 및 장거리 타격 능력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늘리면서 장거리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망 회피 능력을 강화해 왔다. 2025년 미국 연례위협평가는 북한이 미국과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고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보고됐다.

2026년 미국 연례위협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시험했다. DIA는 2025년 북한의 ICBM 보유량을 10기 이하로 평가했으며, 2035년까지 50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2017년 액체연료 방식의 화성-14형과 화성-15형 시험에 성공했으며, 2022년에는 화성-17형의 시험발사를 시작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에는 고체연료 방식의 화성-18형과 화성-19형을 각각 시험했다. 2025년 10월에는 화성-20형을 공개했으나, CRS 보고서 발간 시점까지 비행시험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은 괌 등 역내 미군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화성-12형과 화성-16형 등을 개발했으며, 2026년 10월에는 새로운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극초음속 전략무기체계라고 설명했다.

단거리 및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역내 미군 전력을 타격할 수 있다. 특히 화성-11가형(KN-23)과 화성-11나형(KN-24)은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은 이 두 미사일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5. 잠수함발사미사일 및 첨단 미사일 기술 개발

북한은 탄도미사일 전력을 다변화하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도 개발하고 있다. 2019년 핵탄두 탑재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진 북극성-3형을 시험한 이후 북극성-4형, 5형, 6형을 공개했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의 잠수함 개발이 SLBM 개발 속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진전되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은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V)와 다탄두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2025년에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화성-16나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발표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2026년 9월과 10월에도 관련 시험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탄두를 탑재해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24년 6월 관련 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관측자들은 2025년과 2026년에 실시한 개량형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이 향후 다탄두 미사일 개발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0472?hl=IF10472&s=2&r=4

*본 보고서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026년 10월 13일 발간한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총 3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발행일 2026년 11월 2일	발행처 한미의회교류센터
『KIPEC BRIEFS』 는 한미의회교류센터가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발행하는 미국 의회 입법 및 현지 소식입니다.	

KIPEC is registered under FARA. This material is distributed by the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KIPEC) on behalf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 information is on file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